



미디어 스펙트럼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미래 세대 짐 덜어주는 결정

원자력 정책은 항상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 내용이 뒤따른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있다.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의사 결정 방법이 바뀌었지만, 공론화 방식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

정부가 원전 정책 중 가장 휘발성이 강한 '사용후핵연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꾸려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만들어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예정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에 앞서 사전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구성원들의 너무 다른 성향 등 우려되는 것이 많

다. 그렇다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지금 결정을 미루고 미래 세대에게 무작정 결정을 떠넘길 수 없는 발등의 불과 같은 긴급한 현안이다.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뾰족한 관리 방안 없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만 갔다. 월성원전은 2020년,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은 2024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속히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 원전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결정 과정과 2003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안 사태'까지 그동안 우리가 겪은 값비싼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 간에 갈등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우선되는 정책의 틀을 만들어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 <전기신문> 사설 05-18



‘후쿠시마 악몽’에도 일본이 원전을 신증설하는 이유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계획 초안에 원자력을 ‘중요한 기간전력원’으로 명기하고 2030년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전 신증설 허용을 염두에 뒀다. 목표치를 유지하려면 원전 30기가 가동돼야 하는데 현재는 8기에 불과하고 재가동·연장 가동을 하더라도 노후 원전이 많아 신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초안에 신증설을 명시하기는 않았지만 ‘안전성·경제성·기동성에서 우수한 원자로의 추구’라는 문구를 넣어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반대 여론이 어느 나라보다 거세다. 여론 내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중심으로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베 신조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계획 초안에서 밝혔듯이 원전이 안전성·경제성 등에서 다른 에너지에 비해 뛰어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 비중 축소 공약을 과감히 철회한 배경과 같은 맥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약 수정을 얘기하면서 “원전은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방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대만이 올해도 여름철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2곳의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위주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힘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30%)이 세계 평균(10%)보다 높은 만큼 축소할 여지는 있다. 그렇다고 원전을 아예

배제하거나 탄소 배출을 이유로 석탄을 기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환경 오염이 미미한 석탄 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정책은 수급 안정과 경제성·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수립돼야 한다. 탈원전을 고집하지 말고 원전과 석탄·LNG·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서울경제〉사설 05-18

北 비핵화 앞당길 한국형 原電 지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40년에 걸친 건설·운전 경험을 축적해온 한국의 원전은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는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원 발언이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과 편익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반갑다.

지난 3월 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이 한국과 UAE 관계에서 ‘신의 축복’이었다고 했다. 원전 수출을 기화로 UAE와 특별 전략적·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UAE 원전 4기 수출은 건설로만 22조원, 60년간 운영수익 56조원 등 총 78조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다. 또 에너지, 반도체, 보건 의료 분야에서 26조원 규모의 부가적인 경제 협력과 외교·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등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낳았다.

사우디는 석유 자원 고갈에 대비해 비(非)탄소 에너지 지원을 확보하고 원자력 기술을 손에 넣어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

우리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전’의 상용화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 UAE와 사우디 모두 제3국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와 공동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에너지국의 ‘2017세계 에너지 전망’자료에 따르면 신기후 정책에 따라 2040년 세계 원전 용량은 2016년보다 25% 늘어난 5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이며, 기후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가능 개발 시나리오가 추진되면 720GW까지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160여 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과 체코 원전이 포함돼 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 수출은 제조업 수출이 내리막길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의 수출 가능성은 1995년 시작된 대북(對北) 경수로 사업에서 태동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모든 원전 설계 문서와 건설 진행과정을 영문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UAE 원전 수출 성사에 큰 도움이 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 무드가 다시 조성되고 있는 요즘 대북 경수로 사업의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북한 과학기술자들을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종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북한의 발전용량은 766만킬로와트(kW)로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우리나라의 1978년(773만kW) 수준이며 2016년 1억kW를 넘어선 우리나라 발전용량의 7.3%에 불과하다. 더구나 북한 발전설비의 61%

는 이용률이 높지 않은 수력발전이라서 2016년 실제 전력생산량(239억kWh)은 우리나라의 2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의 전력 사정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므로 100만kW 원전 한두 기를 건설하면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잉여 전력을 송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 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수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의 원전 기술은 손에 든 떡이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북녘 동포에게도 나눌 수 있는 식량이다. 그냥 버려서 썩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선택이다.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국경제〉 05-17

에너지 전환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만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극과 극을 오가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83%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지지율 중 가장 높다. 어쩌면 일반국민은 남북 정상회담 성공으로 안보 불안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문 대통령이나 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국정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신뢰하면서 당장의 정책 효과에 연연하기보다 아직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판단하기 때문 아닐까? 그간 누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주요 기조는 탈원



전·탈석탄이라 불리는 원전과 석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즉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에너지 전환”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등장, 문 정부 출범으로 주요 국정과제가 되었다.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가 학계와 시민사회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3.12점을 줬다. 중앙값인 3점을 살짝 넘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같은 기준으로 실시된 예전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엔 2.2점, 2016년에 1.48점을 받은 데 비해서는 진일보한 결과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 1월에 함께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40%(매우 잘함 5%, 잘함 35%), 보통 40%, 부정 평가 20%(못함 15%, 매우 못함 5%)로, 5점 만점 환산 시 3.2점이었다. 사회 전반적인 동의를 뜻한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에너지를 보는 일반 시민의 관점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보다 ‘안전과 생명’이 더 우선이란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길고도 고된 여정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이제 겨우 출발선을 지났다. 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에도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조직과 인력, 심지어 예산까지 많은 부분이 에너지 전환에 맞서 있다. 전환되어야 할 기존 에너지 체제를 지탱하거나 확장하려고 만들었던 것이었고 전환 움직임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에.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원

전을 진흥하는 법과 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연구개발비도 여전히 엄청나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지만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어렵고 지자체장들의 에너지 전환 의지도 같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 간 엇박자도 있어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 사라질 일자리와 생겨날 일자리가 있고 에너지산업생태계가 변화되기에 정의로운 전환의 기획이 필요하다.

에너지 시장, 특히 전력 시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회 환경 비용의 내부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경유세 상대 가격 조정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 전환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 필요하다. 정부 혼자서는 어렵다. 최근에 전문가와 기업인, 활동가, 정치인들이 함께 모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열린 플랫폼으로 ‘에너지전환포럼’이 출범했고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도 출범했다. 협치의 공간을 넓히고 사회적 대화를 늘리자. 전환의 길은 만들어가야 하기에.

—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05-11

이상한 ‘원전 하나 줄이기’ 성과 계산법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사업의 지난 5년간 성과 및 효과가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5년간 이 사업의 성과로서 생산, 효율화, 절약 분야에서 367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소비를 감축했고, 이것은 발전소 1기당 평균 에너지생산량 92

만TOE/년의 4배가 되어 당진석탄발전소 400만kW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연 1.6조원, 원전 건설비로는 4.5조~5.4조원 절감, 대기 오염물질도 29%를 감축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성과가 사실이라면 연간 2,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쓴 결과니 엄청난 효과를 거둔 것이다.

그런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성과로 설비 대체는 석탄발전으로, 건설비 절감은 원전이 등장한 것은 어리둥절하다.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요즘, 서울시는 버스에 쓴 표어를 원전 대신에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석탄발전소 하나'라든가 '절약하는 당신이 석탄발전소 하나 줄이는 녹색발전소'라고 바꾸고 싶었던 것 같다. 서울시의 성과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자.

원전 하나 줄이기의 5년간 성과 367만TOE 중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이 327만TOE로 성과의 90%, 생산 39만TOE는 전체의 10% 정도다.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통틀어 수요 관리라고 한다. 수요 관리 성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를 믿기 어려운 정황은 많다.

정부의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서울시 에너지 소비는 사업 시작 전년도인 2011년 1550만TOE에서 2016년 1540만TOE로 10만TOE(0.6%)가 감소했을 뿐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 서울시 인구가 1,007만명에서 985만명(2.2%)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성과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수요 관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조차도 사후에 효과를 측정하거나 평가(measurement & verification)하지 않는다. 대개 사업 시작 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한다.

국내에서 수요 관리 사업의 M&V 사례가 없는 이유는 평가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나아가 평가 결과가 당초 목표에 미달하여 예

산이 허투루 쓰인 것이 확인되면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원전이 석탄으로 둔갑한 것도 그렇지만 4백만kW를 줄였다는 것은 성과 부풀리기를 넘어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성과 366만TOE는 5년간의 누계치이다. 연간 평균은 73만TOE이다. 누계와 평균에 주목하자. 서울시가 발전용량 절감의 계산근거로 제시한 100만kW급 발전소 1기의 연간 평균 에너지생산량은 92만TOE이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5년간의 누계를 평균적인 발전소가 1년간 생산하는 에너지와 비교하여 4기를 줄였다고 하는 것이다.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이나 석탄은 당연히 평균보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실적과 전력수급계획 전망에 근거하여 기저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량을 계산하면 연간 161만TOE 정도다. 즉, 서울시가 주장하는 성과의 연간 평균값 73만TOE는 원전이나 석탄 1기의 반년치 에너지 생산량 수준에 불과하다. 성과가 무려 8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마치 다섯 게임에 안타 4개를 친 선수와 한 게임에 안타 2개를 친 선수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복잡하여 설명을 생략하지만 에너지 절약량을 용량으로 환산하자면 절약 패턴과 피크 발생 시간과의 동시율(coincidence) 등이 고려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

원전 건설비 5조원은 절감되었을까? 백만kW급 원전 건설비는 2.6조원이다. 설비수명 40년,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연간 비용을 계산하면 1,611억원이 된다. 성과가 0.5기 이므로 절감액은 800억원에 불과하다. 4.5~5.4조원의 원전 건설비를 절감했다는 주장은 아마도 1년만 쓰고 폐지하는 원전을 전제한 듯하



다. 1년만 쓰자고 10년 걸려 발전소를 짓지는 않는다.

이 사업에는 대략 연간 2,500억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갔다. 보도와 같이 연간 경제적 효과가 1,6조원이라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주장된 성과를 원유 도입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600억여원, 전기요금으로는 대략 3,600억원 정도다. 성과가 맞을 경우라도 본전 정도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코 대박 사업은 아니다. 성과를 부풀리기보다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시민참여형 에너지생산 확대 등 의미있는 사업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진솔하게 결과를 알렸어야 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5년 동안 2조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종 성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계산도 대충, 성과는 터무니없이 과장, 효과는 왜곡, 이래서는 곤란하다. 올해도 이 사업에 2,7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이다. 서울시민이 성실하게 낸 세금이다.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써야 한다. 오늘도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 하나'버스는 시내를 달리고 있다.

- 노동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투뉴스) 05-21

최근 원전 이용률 급감을 우려한다

울산 근교의 월성원자력본부에는 '이용률 세계 1위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이는 준공 3년만에 세계 원전 277기 중 제1위 이용률(98.4%, 85.4.1~86.3.31)기록을 세운 월성 1호기를 기념하는 탑으로 국내 최고이고 유일하다. 이후 4회의 1위 추가와 타원전의 이용률 1위 달성으로, 국내 원전 연평균 이용률이 '07년까지 93.4% 이상의 세계 최우수 실적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해 2017년에는 급기야 세계 평균 수준인 71.2%까지 떨어졌다.

생산 공장들은 가동 시간인 가동률(Availability Factor)을 따지지만, 원전 이용률(Capacity Factor)은 연간 정격 발전량 대비 총발전량의 비율로, 얼마큼 전출력으로 운전하여 연간 총발전량과 순이익이 높은지를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는 원전 이용률을 1% 높이기 위해 각국의 경쟁을 한다. 먼저 정기검사 후 불시정지나 출력 감발이 없는 한주기 무고장 운전(One Cycle Trouble Free)을 지표로 삼고, 설비의 설계, 제작, 건설, 운전, 정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국내 총25기 원전이 164회 OCTF로 호기별 6.56회며, 특히 월성 2호기는 국내 최초 6주기 연속(09.9~16.12)을 달성하는 쾌거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과 원자력법에 따른 법정 검사를 위한 계획정비(Overhaul) 기간을 단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2002년 세계 최고 전력사의 하나인 미국 Braidwood 원전(경수로, 1200MW)의 최단 계획정비기간 14.5일을 벤치마킹하여, 월성 4호기를 최적 공정 관리로 18.7일(03.6.13~7.1)만에 터빈/주발전기 분해 점검까지 마쳐 국내 신기록과 캐나다에 기술을 전파한 적이 있다.

현재 국내는 가동중 정비 확대, 정비 기간 단축과 함께 위험도는 낮추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기반 운전 중 위험도 평가(RMS)'와 '정지/저출력 시 위험도 평가(ORION)'를 개발하여 시행중에 있다.

세계는 원전 이용률 향상 노력으로, 미국은 이용률이 상승세(2012~16: 86.1~92.1%)인데 반해, 한국은 하락세로 개발된 노하우도 무색하게 정반대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 이유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이다. 원전 이

용률 급감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짚어본다.

첫째, 원전 이용률 급감은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한다. 국내 원전 1일 정지에 따른 연료대체비는 통상 1기당 7억원(70만KW), 10억원(100만KW)으로, 타연료 수입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씩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요, 경제의 기동뿌리가 썩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꼴이다.

최근 국내 원전 이용률이 급감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장기간 O/H(55~634일간)로 절반의 발전기가 정지된 때문이다. 한전도 원전 정비 장기화는 민간 전력 구입비 증가로 작년 당기순이익이 78.9% 감소하였고, 4조원의 적자가 증가했다는 보도다.

또한 한수원(주)도 금년 당기순이익을 작년 8,618억원에서 98.5% 감소한 125억원으로 급감 전망인데, 이는 이용률 감소와 정비 등의 비용 증가로 분석했다. 결국 전력사의 순이익 감소는 공기업 생존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탈원전 중인 독일은 '00-14' 전기요금 자료에 가정용 226%, 산업용 327%가 올랐으며, 후쿠시마 사고 후 일시 정지된 일본도 동기간에 각각 25%, 38%가 상승하였다. 또한 국내 전기요금 30% 인상 시 수출 제조 중소기업의 적자 전환이 35.4%란 국회 기관 연구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둘째, 원전 수출에 적신호를 우려한다. 원전 수출 국가인 서방 3개국 중 건설가/공기, 운영 실적 등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지만, 이용률 급감은 운영실적 불량으로 수출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금의 발전 정지가 행여 탈원전 정책의 눈치 때문은 아닐까? 지금까지 규제가 부실했다면, 40년간 세계 최고 이용률과 OCTF 실적은 우연한 것일까? 국민들은 왜, 얼마나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하절기 전력 피크를 대비해야 하고, 국가 중

대사를 다루는 중요 시기이다. 국익을 위해 우려가 아니라 책임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을 원전사업자, 규제자, 정부가 명심해야 할 때이다.

- 장태휘 Fugen21c 기술컨설턴트 대표
(경상일보) 05-21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통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는 핵심 키워드로 평화, 외교를 포함 다섯 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소통'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 가운데 핵심이 '소통'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정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온라인 국민청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객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들과의 소통 없이는 기업의 생존도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한창인 IT시대에 고객과의 소통으로 오프라인에서 승승장구 하는 기업이 있다.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일본의 츠타야 서점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CCC)이다.

츠타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책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츠타야 서점에서는 책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츠타야 서점은 창업 시절 도서, 음반, DVD 대여점에서 시작해 음반, 문구, 소품, 전자제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복합매장으로 영역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 편의점까지 입점하는 복합 문화 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요즘 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형 서점 모델이 시초가 된 곳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츠타야 서점이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것이다. 츠타야 서점의 CEO인 마스다 무네아키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답이 나온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엮어 펴낸 책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꼭 집어서 제안하면 계약은 성사된다. 답을 알 수 있다면 기획은 백발백중인데 다들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답을 찾으려 하지는 않고 한방만 노린다. 장사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혹은 고객의 기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매장을 열기 전 매장을 찾는 고객의 입장이 돼 고객의 기분으로 매장을 바라본다고 한다. “나라면 과연 가고 싶은 곳인가? 어떤 길을 지나서 어떤 풍경을 보며 매장을 방문하는가? 다양한 고민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그렇게 고객의 기분으로 답을 찾고 성실하게 그 답을 실현하면 고객은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한다.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인 것이다.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과의 소통, 고객과의 소통이 최대 화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아도 정책이나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소통은 더욱 더 중요하다.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도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지역민들과의 소통 없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다.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 원자력안전협의회, 원전소통위원회 등 정례적인 회의체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원전 운영에 대해 소통과 자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인근 25개 마을과 새울본부 각 팀을 연결해 ‘1촌 1팀 자매마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한 원 운영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에 따라 최근 신고리 건설 시민참관단을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건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열린 자세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할 때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넘쳐 날수록 소통은 더욱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온다. 츠타야 서점 CEO인 마스다 무네아키의 경영철학처럼 “오직 고객의 입장과 고객의 기분으로 생각하면”기업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있다. 한수원도 “오직 국민과 지역민의 입장과 기분으로 생각하면”원자력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 하재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울산매일〉 05-23